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②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③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 ②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④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7.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 ②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 ④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 ⑤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9.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②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 ③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 보험계약
-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차약정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부담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채소합의도 무효이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⑤ 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13.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5.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17.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② 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③ 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 ④ 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② 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 ③ 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④ 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⑤ 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법률행위의 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③ 2026년 5월 28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 ④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⑤ 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3.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④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 ②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25.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 취소권 ② 계약해제권
③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정법

26.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로 기간이 만료한다.

- | | |
|-----------------------|----------------------------|
| ①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 ②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
| ③ ㄱ: 산입한다, ㄴ: 말일 | ④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
| ⑤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전날 | |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 ①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 ②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③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⑤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28.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
|------------------------------|------------|
| ① 도로점용허가 | ② 버스운송사업면허 |
| ③ 자동차운전면허 | ④ 공유수면점용허가 |
| ⑤ 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 |

29.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 ① 명령 ② 설권 ③ 인가 ④ 허가 ⑤ 확인

30.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소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④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31.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선행처분	후행처분
ㄱ	대집행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	직위해제	직권면직
ㄷ	건물철거명령	대집행 계고
ㄹ	사업인정	수용재결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2.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②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 ③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 ④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⑤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부담을 붙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34.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④ 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②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37.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ㄱ)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① ㄱ: 3, ㄴ: 30 ② ㄱ: 3, ㄴ: 60 ③ ㄱ: 3, ㄴ: 90
④ ㄱ: 5, ㄴ: 60 ⑤ ㄱ: 5, ㄴ: 90

3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④ 가해 공무원은 자신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권리금의 보상 ②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③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④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⑤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41.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	ㄴ. 무효등 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②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 재결을 할 수 없다.
- ③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3.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 ③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 ④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 ⑤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결정

44.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 ②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 ③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 ④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45. 행정권한의 대리 및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 ③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 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 ⑤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 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46.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히무효로 보아야 한다.
- ②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히무효가 아니다.
- ④ 임용행위가 당연히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47.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②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 ③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48.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 ②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 ③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 ⑤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경찰건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②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⑤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50.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 ⑤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51.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참여·조정을 강조한다.
- ② 행정행태론은 인간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③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 ④ 비교행정론은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 ⑤ 행정생태론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52. 고전적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분야는 곧 경영의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 ② 테일러(F. Taylor)는 금전적 유인을 근로자의 중요한 동기부여요인으로 간주하였다.
- ③ 굿노(F. Goodnow)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였다.
- ④ 굴릭(L. Gulick)은 조직설계를 위해 업무의 분업화와 적절한 조정과 통제의 수단 개발을 중요시하였다.
- ⑤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결과적으로 경험적 연구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규범적·처방적인 것이다.

53.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학에서 사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 ② 분권화를 통한 정부조직 내·외부의 참여를 선호하였다.
- ③ 관료들의 적극적 정책결정 담당 역할에 대해 비판하였다.
- ④ 능률성을 행정연구의 새로운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 ⑤ 학문적으로 당시의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을 더욱 강조하고 옹호하였다.

54.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검사 ② 법관 ③ 국무위원
④ 지방의회의원 ⑤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5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의 반응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 ②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며, 개인이익의 총합이라고 강조한다.
- ③ 성과에 대한 기본적 통제만을 전제로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 ④ 민간기업의 경영 경험과 경제이론들과의 접목을 통해 시민을 경제적 차원에서 자율적인 소비자로 간주한다.
- ⑤ 정부의 역할은 시장과 정부로 이원화해서 ‘노젓기’ 기능은 민간영역의 시장에 넘기고, ‘방향잡기’에 해당하는 정책개발 등의 핵심기능에 집중하는 것이다.

5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념은?

- 명확한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함
-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
- 동태적이고 합목적적인 개념

-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 합리성 ④ 합법성 ⑤ 민주성

57. 외부적 행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③ 정당에 의한 통제
-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⑤ 언론과 여론에 의한 통제

58. 정책대안의 미래예측기법 중 ‘다른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주관적으로 이끌어내는 기법은?

- ① 시뮬레이션 ② 브레인스토밍 ③ 정책 텔파이
-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5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안정적인 상황 하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 타성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정책결정자의 분석능력, 시간, 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 ① 합리모형 ② 점증모형 ③ 엘리슨(Allison) 모형
- ④ 쓰레기통 모형 ⑤ 최적모형

60. 정책집행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독립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립스키(M. Lipsky)는 일선관료들이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업무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에 따르면, 협상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이 개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와 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유형이다.
- ④ 후방접근법이라 불리는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고긴(M. Goggin) 등은 정책집행은 동태적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정부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의 결과도 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61.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한 상황에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정책때문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는 평가에 선행해서 발생된 외재요인과 집행기간 동안 결과에 영향을 미친 내재요인이 있다.
- ③ 특정한 상황 하에서 타당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타당성을 가질 정도를 의미한다.
- ④ 정책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 도구가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⑤ 동일한 평가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6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A. Maslow)는 인간의 내부에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충동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일정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는 2요인 이론을 통해 인간은 이원적 욕구구조를 가지며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③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에서 인간이란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지시 받기를 선호하는 것은 Y이론에 의한 인간관이다.
- ④ 브룸(V. Vroom)은 기대이론에서 개인의 선택 행태에 초점을 두고 행위와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⑤ 포터와 로울러(Porter & Lawler)는 기대이론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선택하였다.

63. 조직적 측면에서 조직 내 갈등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배분을 둘러싼 경쟁 ② 제도와 규정의 미비 ③ 객관적 평가기준의 결여
④ 보상의 불공정성 ⑤ 독선적인 구성원

6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시아와 글리노우(Sethia & Glinow)의 조직문화 유형은?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높은 동시에 그들의 실적에 대한 보상체계가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음
○ 실적에 따른 금전 및 승진 보상체계에 역점을 두지만, 지위에 따른 보상 체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 ① 엄격문화 ② 통합문화 ③ 배려문화 ④ 냉담문화 ⑤ 통제문화

65. 국가공무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②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④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6.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중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상호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상대적 평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감점수법 ㄴ. 강제배분법 ㄷ. 대인비교법 ㄹ. 서술법 ㅁ. 평정척도법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68.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예산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정건전성 확보

ㄴ. 국민부담의 최소화

ㄷ.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고

ㄹ.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

ㅁ.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69.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에 한하여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다.

④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당해연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70. 정부 회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 유형은 행정부 소속형에 해당한다.

② 성과 중심의 회계검사는 의회 민주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의회가 예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③ 합법성 중심의 회계검사는 결과 중심의 회계검사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평가하는 환류 중심적 개념이다.

④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의 대상은 국가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이며, 그 이외의 것들은 선택적 회계검사의 대상이다.

⑤ 현대적 회계검사와는 달리 전통적 회계검사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기준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관리 책임성과 정책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71.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권은?

-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행정권 ④ 자치재정권 ⑤ 자치사법권

7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시·도지사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73.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의 경계는 정부기관에 한정된다.
- ②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시한다.
- ③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업가적 마인드와 정부혁신을 강조한다.
- ④ 정보통신기술(ICT)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는 계속 변한다.
- 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과 같은 후기신행정학 등의 영향을 받았다.

74.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법의 주요 관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분권화의 확대 ② 통솔범위의 재조정
- ③ 계선과 참모기관과의 관계 ④ 공식적 조직 구성원의 태도
- ⑤ 공식적 조직의 명령체계 수정

75.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② 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은 긍정적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 ③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해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 ④ 정부가 민간기관과의 법률적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이다.
- ⑤ 정부조직 내 집행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